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6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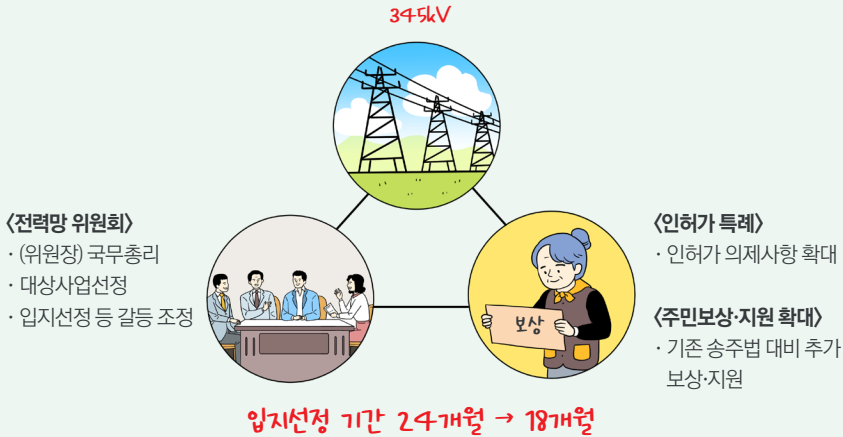
01. 산업통상자원부

자세한 내용은 p.073

345kV 이상 국가기간 전력망에 대한 국가적 추진 체계 마련, 주민 보상·지원 확대 등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

- 345kV 국가기간망에 대하여 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해 주민 보상·지원을 확대합니다.



02. 산업통상자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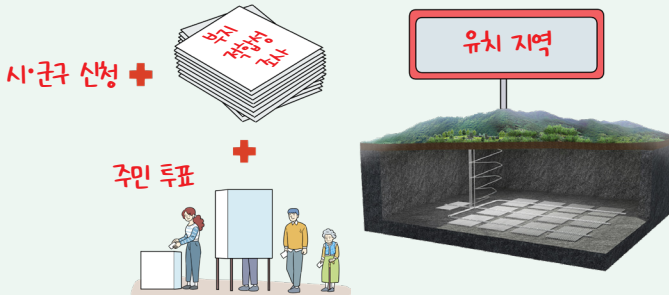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074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부지선정 및 유치지역 지원 근거 마련

시행일 : 2025년 9월 26일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처분하기 위한 관리시설 부지를 선정하고, 유치지역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관리시설 부지선정 : 시·군·구 신청 → 부지적합성(기본·심층) 조사 → 주민투표
- 유치지역 지원 계획 수립 : 유치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해 특별지원금 지원 등
- 전담조직 신설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 구성·운영
- 부지 내 저장시설 : 설치 시 주변지역 의견수렴 및 지역지원 방안 마련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상향 개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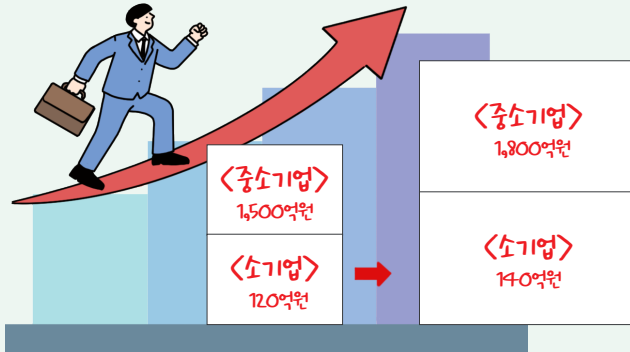
시행일 : 2025년 말

- 생산원가 급증 등에 따른 매출액 증가만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중소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현실화하여 상향 개편합니다.

-매출기준: (중소기업) 1,500 → 1,800억원 / (소기업) 120 → 140억원

-매출구간 수: (중소기업) 5 → 7개 / (소기업) 5 → 9개

-매출 상한 확대업종: (중소기업) 16개 업종(현행 대비 200~300억원 확대)
(소기업) 12개 업종(현행 대비 5~20억원 확대)



*약 573만개 중소기업이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지원사업 등 수혜 지속 가능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7

국토·교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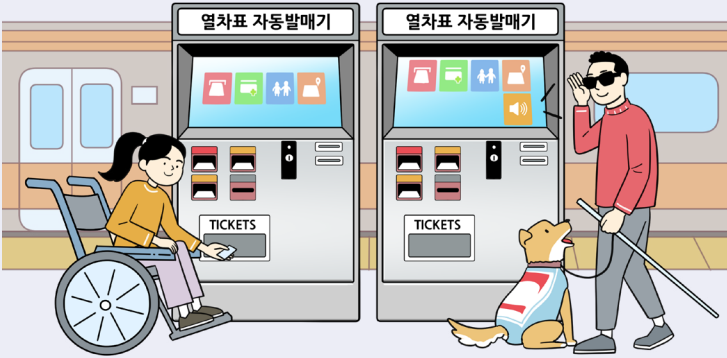
01.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095

교통약자를 위한 신형 승차권 자동발매기 도입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규격표준화 승인 이후 도입 예정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낮은화면, 음성안내 기능 등이 가능한 신형 열차표 자동발매기를 수도권에 100여 대 이상 도입합니다.



02. 국토교통부

자세한 내용은 p.096

비(非)아파트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 시행

시행일 : 2025년 6월 4일

-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 등)에 적용되는 6년 단기 등록임대주택 제도가 새롭게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과 준주택을 대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10년인 장기임대주택 제도 외에 6년인 단기민간임대주택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8

농림·수산·식품

농업진흥지역 허용 행위 및 시설 면적 확대

시행일 : 2025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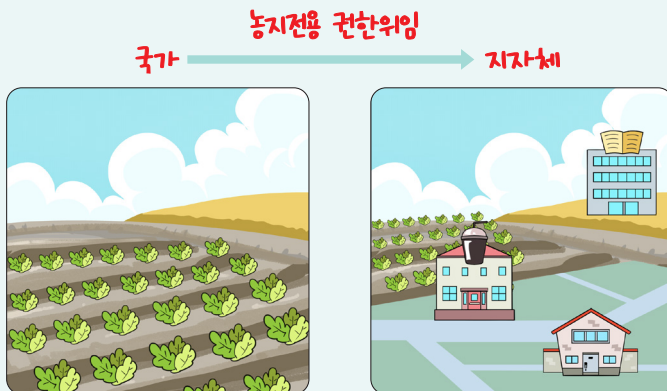
- 농업진흥지역에 폭염·한파 쉼터의 설치 가능해지고, 근로자 숙소의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등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 허용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산지유통시설에 근로자 숙소 설치 허용(부지 내에서 시설면적의 20%까지)
 -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관광농원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 완화



농촌특화지구 내 농지전용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

시행일 : 2025년 6월

- 농촌공간의 효율적 이용 및 개발 등을 위해 지정하는 농촌특화지구의 농지전용 권한이 지자체로 위임됩니다.
 - 지자체의 농지활용에 대한 자율성이 확대되어 지역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자 요건 완화

시행일 : 2025년 6월 2일

- 농지이용증진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단체 구성 농업인(10→5인) 또는 농업법인 수를 축소하고, 농업법인의 경우 단독으로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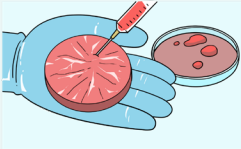


푸드테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시행일 : 2025년 12월 21일

-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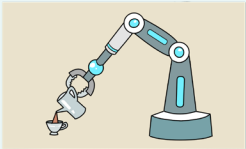
<푸드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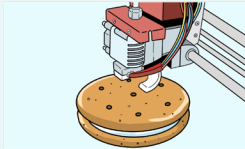
세포배양식품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3차원식품프린팅

<푸드테크 육성에 관한 법률>

육성 추진 체계 마련

신고 사업자 지원

전문인력 양성

창업 및 금융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 인정

시행일 : 2025년 5월 29일

- 제주특별자치도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로부터 '구제역 백신접종 청정지역'으로 인정받아 축산물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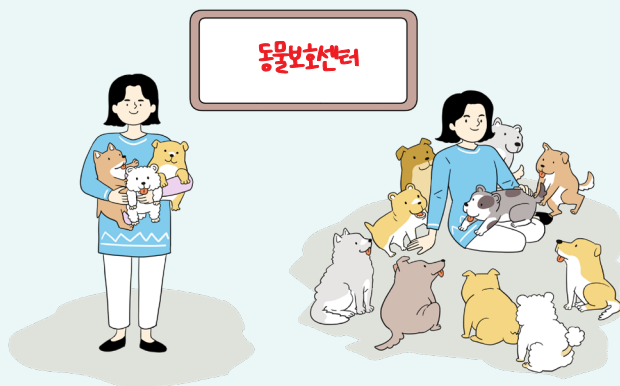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가능 동물 마릿수 확대

시행일 : 2025년 7월

- 동물보호센터를 통해 1인당 더 많은 동물(3 → 10마리)을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 동물보호센터의 장이 추가 입양에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경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방법 개선

시행일 : 2025년 8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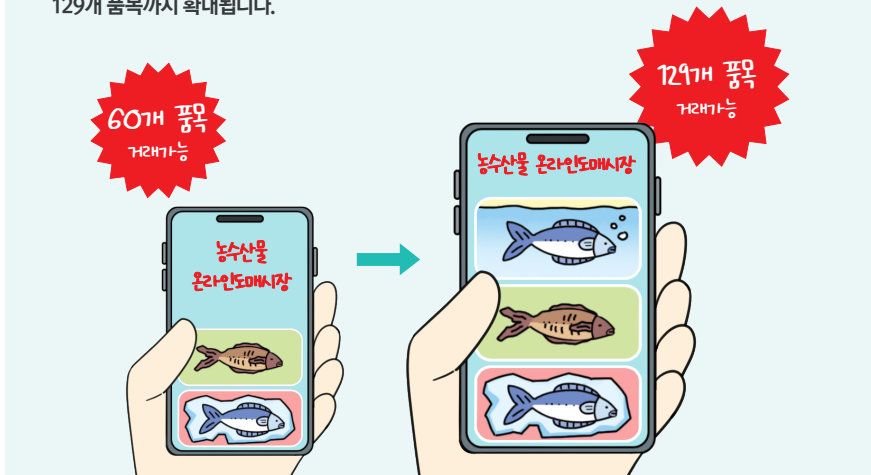
- 동물병원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운영 시)에 함께 게시하는 것으로 개선됩니다.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수산물 거래 품목 확대

시행일 : 2025년 하반기

-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http://kafb2b.or.kr>) 수산물 거래 가능 품목이 활·선어 등 129개 품목까지 확대됩니다.



소규모어가 직불제 지급대상 확대

시행일: 2025년 4월 1일

- 노지 내수면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업인들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신규 편입됩니다.



팽창식 구멍조끼 보급 한시 지원 사업 추진

시행일: 2025년 6월 1일

- 2025년 10월부터 구멍조끼 착용의무 확대에 따라 전 어선원을 대상으로 착용 및 활동이 편리한 팽창식 구멍조끼 보급을 위한 국가지원이 확대됩니다.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09

국방·병무

01. 병무청

자세한 내용은 p.1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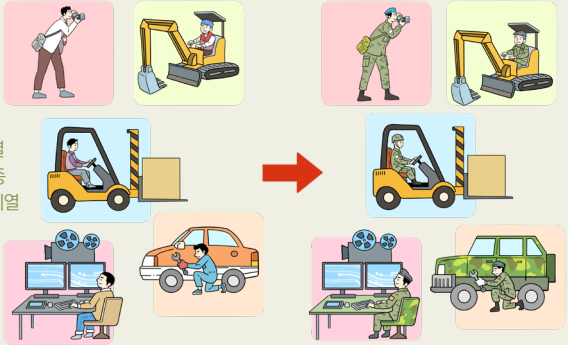
취업맞춤특기병 직업계고 모집 특기 확대 실시

시행일 : 2025년 7월 접수부터

- 직업계고 졸업(예정)자의 취업맞춤특기병 지원 가능 특기가 83개 모든 특기로 확대됩니다.

〈기존〉

육군 25개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



〈변경〉

취업맞춤형
특기병 선발
모든 특기(83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10

행정·안전·질서

01. 법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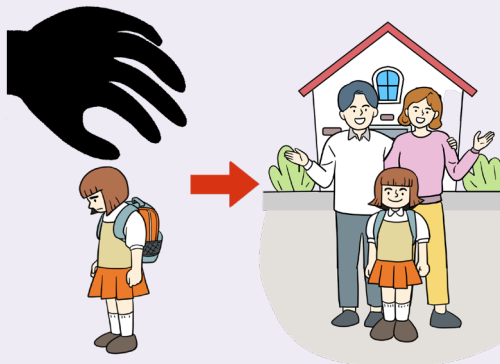
자세한 내용은 p.170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시행일 : 2025년 6월 21일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4. 12. 20. 개정) 개정되어 아동학대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아동 보호조치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였습니다.

- 학대피해아동 연고자에게 인도
-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 부여
- 검사에게 학대아동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등 부여



02. 행정안전부

자세한 내용은 p.173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낙찰하한율 상향 등 지방계약 제도개선 시행

시행일 : 2025년 7월 1일

-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 등을 위하여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지방계약 제도개선

〈지역 건설업체 적정대가 보장〉

- 낙찰하한율 2% 상향
- 공사에 따른 간접노무비율 1~4%p 상향
- 기술제안인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4~0.6%p 상향
- 공사손해보험 의무가입 대상 확대

〈지역 중소 업체 지원〉

- 인구감소지역 업체에 대한 가산점 신설(1점)
- 하도급관리계획 평가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의 만점 기준 상향(20→30%)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 민간 앱 확대

시행일 : 2025년 7월

- 정부 앱인 '모바일 신분증'과 민간의 '삼성윌렛'을 통해 발급받은 모바일 신분증*을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을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 도입

시행일 : 2025년 7월 26일

- 여객선과 위험화물운반선 소유자의 안전투자 정보를 공개하는 해운분야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 해양사고 예방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추진합니다.

